



### 국내 소식

#### 국립공원에서 봄을 맞이하세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등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봄을 체험할 수 있는 250여 개의 다양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얼음이 녹아내리는 계곡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백두대간을 타고 올라오는 신록을 보면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령치 백두대간 해설프로그램' 등 3종의 자연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1,0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았던 북한산국립공원에서도 봄과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나무야 놀자, 벌레야 놀자' 등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기름유출사고로 방제가 한창인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봄이 찾아 왔음을 알리는 '몽산포·학암포 갯벌 이야기', '해안생태계를 한 눈에', '모래 언덕이 늘어났어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해설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검색 및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nps.or.kr](http://www.knps.or.kr))를 통해 가능하다.

모든 프로그램은 생태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연환경안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봄을 보고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누릴 수 있다.

#### 수돗물에 흙·곰팡이 냄새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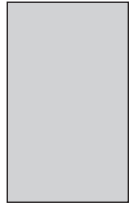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초래했던 물질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지오스민’과 ‘2-MIB’ 등 수돗물에서 각각 흙냄새와 곰팡이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현재 포름알데이드 등 21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같은 발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전국 4대강 수계 서울 암사 정수장 등 35개 정수장 수돗물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59종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오스민 등 20종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수돗물을 350 회 분석한 결과, 지오스민은 32회, 2-MIB는 11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물질이 비록 검출농도가 낮고 유해성이 없는 심미적인 물질이기는 하나, 체계적인 관리와 맛있는 물 공급을 위해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계별 원·정수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강화해 아토피 줄인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피부과민성 항목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에 새로 추가된다. 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 등이 폐지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규제가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향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요건(100kg 이하 수입)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용으로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 지하수 수질 국가측정망, 4천곳으로 확충

환경부는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례의 증가와 방사성 물질 등에 의한 지하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하수 오염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수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확대·개편 계획’을 마련,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 총 2,341지점의 우리나라 지하수 측정망 중 86%가 이동지점으로 고정관측 밀도가 유럽 환경청(EEA)이 걱정 수준으로 제시하는 4개/100km<sup>2</sup>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개인 소유 관정을 측정망으로 지정·활용하고 있어 관정폐쇄·채수거부로 인한 잦은 지점 변경 및 취수원 관리 부실로 인한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 확립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유역·지질 특성별 지하수 수질 조사를 위한 배경 수질 측정망(1,304개) 및 산업단지, 매립장



등 대규모 오염원의 지하수 영향 파악을 위한 오염감시 측정망(2,164개)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소유 측정망 4,000 지점을 2020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측정망 2,341지점은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해 지역측정망으로 통합하고 지역 내 비상급수시설, 마을상수도, 학교 등 공공 관정을 지하수 측정망으로 편입하여 2030년까지 지역측정망 3만3천 지점을 확충할 계획이다.

### 바다에 버려진 '음폐수' 에너지로 활용

바다에 버려지던 음폐수(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청정 연료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012년까지 약 4,500억원을 투자해 1일 5,000여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08~'12)'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화시설 5개소(1,460톤/일)이상을 신설하고, 기존시설의 공정 개선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음폐수 자원화 및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1,500여대를 운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 또는 7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과 함께 연간 109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2007년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은 약 750만톤이며 음폐수는 발생량의 약 58%인 170여 만톤이 지정된 해역에 투기되어 왔다.

### 태안주민, 장기 건강영향조사 받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해당 지역의 산모와 영유아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2010년까

지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또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건강영향조사결과가 8월에 발표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건강영향조사 실시현황'을 지난달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국방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회의'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노출평가와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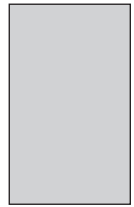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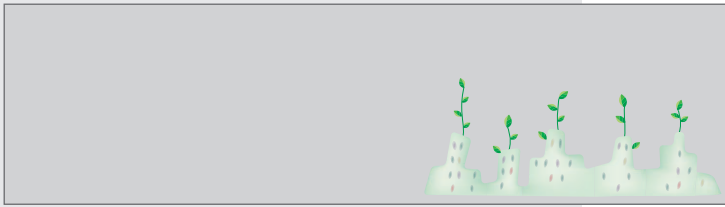
우선 보건복지부는 유류 노출지역 및 대조군 지역주민과 방제작업에 참여한 군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노출평가와 유류 노출지역 주민의 급성기 대사산물 검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12월 말부터 환경운동연합, 단국대 환경성질환연구센터, 한국환경회의 등이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조사체계를 갖춰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했다. 또 산모와 영유아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중금속·유해물질 조사, 육아 건강 및 영양상태, 인지발달 및 행동발달 상황 등 2010년까지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동의 체내 장기 성장·발달시기를 고려해 2010년 이후에 계속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이밖에도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환경사고에 대비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정책소식 '문자'로 받아보세요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정책 추진상황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폐수배출사업장 등 업무담당자 약 1,000명에게 휴대폰으로 실시



간 문자 서비스하고 있다. 수질TMS 정책은 추진상황을 수질TMS 구축대상 공공시설 및 사업장에 신속히 전달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부는 2월부터 수질TMS 구축이 완료되는 2009년말까지 매월 3~5회 이상 문자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운영성적을 평가해서 현장 실무담당자들의 정책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거나 신속히 알려야 하는 다른 부문의 환경정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질TMS 정책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토록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사업장 스스로 공정개선 유도, 배출부과금의 합리적 산정 등 수질관리를 선진·과학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2006년부터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설치대상 공공시설, 사업장은 약 600여 곳이다.

### 새 가구 한달 지나도 새집증후군 위험 여전

침대·식탁·소파 등 새 가구를 구입한 지 한달이 지나도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30% 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가구류 및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수준 및 방출특성 파악을 위해 24종의 생활용품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했으나, 28일이 지난 후에도 TVOC 방출량은 평균 8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평균 30% 정도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PDP TV, 진공청

소기 등 전기·전자제품 4종에 대한 TVOC 방출량 조사 결과, 진공청소기의 경우 가동 전에 비해 가동 후 방출량이 100배 이상 늘어났다.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기기는 대기모드보다 인쇄시에 TVOC 방출량이 5배 이상 증가했고, 흑백 인쇄보다 컬러 인쇄 시 오염물질 방출량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사무기기에 사용되는 토너가 오염물질 방출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

과학원은 “생산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제품이라도 실내로 들여놓거나, 새 가구 구입 후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자제품의 경우 가급적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사용 시에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배기가스 저감장치 자동차 정밀검사 우대

지난 2월 26일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에 평가항목·범위 등을 미리 정해 작성토록 하는 스코핑(Scoping) 절차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토록 하고, 평가서에 대한 공개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정밀검사를

# NEWS

## 환경뉴스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시 지급한 보조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의 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특정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시행사가 책임져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인천 남구 아파트 주민 580명이 교통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3,300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사업 승인기관 및 도로공사와 함께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경인고속도로와 약 42m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파트 소음도가 야간 최고 72dB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65dB)를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아파트부지보다 약 10m 이상 높게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높이 4m의 방음벽만으로는 방음효과

가 미미하다”며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시행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단,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경인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된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아 피해배상금액의 70%를 감액했다.

### (사)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 개소식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지하수수질보전과 관련된 정책에 협조하여 국민 건강과 지하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회장 조희남)가 설립되어 지난 2월 20일 서울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0-16 동화빌딩 505호 ☎02-585-1388)에서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는 지하수 수질보전 관련 전문기술 향상과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지하수 수질보전 관련 필요 시책의 연구 및 건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지하수 수질보전 관련 국제환경단체와의 교류협력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